

2015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

《한국대학교육협의회》

1.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1
2. 지방대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평가할 것 2
3.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 2
4.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
5. 수업연한 다양화를 대학 측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,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전문대교협과 협의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
6. 학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민주적인 경우가 많음. 대학총장이 학칙을 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교협 차원에서 시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할 것 3
7. 일부대학에서는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각하므로 대학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4
8. 대학등록금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 납부 및 은행 납부 시 분할납부제를 고려할 것 5
9. 등록금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할 것 6
10. 석·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할 때 심사비를 받지만 편차가 크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6
11. 대학교육의 잡 미스매치 대책을 강구할 것 7
12.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, 비용 부담도 큰데 학생들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8
13. 대학의 열람실이 부족한 실태를 감안하여 대학들이 적립금을 사용해서라도 열람석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8
14. 입찰공고를 공고기간이 이미 시작한 며칠 뒤에 게시하거나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게시하지 않도록 할 것 9
15.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, 부당업무지시, 고용승계,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0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한국대학교육 협의회	<p>1.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,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(추진 중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의견 전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, 대학특성별 상황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○ 다양한 평가모델을 통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평가과정에서 자체평가 결과 존중 필요 - 대교협 회장단, 국회 방문 의견 전달 및 협조 요청(2015.10~12) -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전달(2016.1.28.) - 국회 3당에 “대학발전을 위한 과제 건의(2016.4.7.) 등 <p>2)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의견 수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이라는 기본취지 아래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- 대학교육 정책포럼(2015.12.4.) 등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p>1) 자율적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의 의견 지속 전달, 지자체와의 연계방안 모색 등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순히 학생수 감축보다는 지역별,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의 구조 개혁과 발전을 지원해야 함 - 교육부, 대교협, 전문대교협 등과 공동으로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 3회 진행 예정(2016.6.7.~6.17) - 3차례 토론회를 통해 대학구조개혁법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	과 지방대학 육성방안 논의 예정
	2. 지방대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방대학 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평가할 것 (완료)	가. 시정·처리결과 1) 평가 시 대학의 특성 반영 ○ 대학의 설립유형, 규모, 소재지 등 특성 반영 2) 지역사회 기여 실적 평가 ○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결과물을 지 역사회와 공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대학 특성 반영
	3.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 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 (완료)	가. 시정·처리결과 1) 대학구조개혁 평가시 대학의 의견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 ○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가 주관 하고,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에서 실행중인 바, 대학구조개혁위원 회의 여러 위원 중 하나인 대교협 회장으로서 4년제 대학의 의견이 반 영되도록 적극 노력함
	4. 대교협의 대학기관평 가인증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(추진중)	가. 시정·처리결과 1) 1주기 인증기준을 수정·보완하여 2주 기 평가편람 확정 ○ 타당성 확보: 대학 기관 전반의 질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 구성 ○ 신뢰성 확보: 평가위원간 신뢰도 확 보를 위한 절차 및 인증자격 모니터 링 강화 나. 향후 추진계획 1) 평가위원 연수 강화 ○ 평가위원 연수 프로그램 일정 확대 및 내용 강화 ○ 평가 점검사항 및 판정기준 논의,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	<p>평가결과 검증 강화</p> <p>2) 평가 결과 활용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방안 마련 ○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○ 인증 결과 활용도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증결과 대국민 홍보 강화 - 인증결과를 토대로 국가간 상호 학력·학위인정 체제 구축
	<p>5. 수업연한 다양화를 대학 측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,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전문대 교협과 협의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(추진 중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전문대교협과의 협의 진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대학과의 견해차이가 크고, 전체 고등교육의 틀을 고려하여 일반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- 전문대교협과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(2015.4.15) -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(2015.10.13.) 등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p>1) 고등교육 전체의 틀 속에서 논의 지속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대만의 일방적 논의로 추진되기보다는 고등교육 전체 틀 속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 및 특성화를 갖출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추진 -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및 역할체계에 관한 연구 추진 예정(2016.6)
	<p>6. 학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민주적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학칙 개정절차에 대한 의견 공유</p>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<p>인 경우가 많음. 대학 총장이 학칙을 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교협 차원에서 시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할 것 (추진 중)</p>	<p>○ 학칙 개정은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해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, 기획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회 최종심의 를 거쳐 이사회 승인 후 총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 등 실무 의견 교환(2015.12.2.) 등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p>1) 학칙 개정에 대한 인식 공유 지속적으로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이 자율적,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 - 교무처장협의회, 기획처장협의회 등 대학내 직능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식 공유 추진 예정
	<p>7. 일부대학에서는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각하므로 대학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(완료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대학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의 항목으로 지정하여 공개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5년부터 10월 정기공시 항목 - 정보공시 항목 : 14-자(1)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- 대학의 자체 진단을 통한 수준을 공개 -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로 구분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. <p>2)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순회교육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	<p>(CPO) 및 개인정보처리담당자 교육 필수 이수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련 교육을 수행</p> <p>3)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에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입공통원서 4대 권역 설명회 (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교육 실시)
	<p>8. 대학등록금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 납부 및 은행 납부 시 분할납부제를 고려할 것 (완료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마련('14.12) 이후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할납부: 전문대 포함 전체 334개교 중 318개교(95.2%)에서 실시('15년) - '11년) 298개교 → '12년) 305개교 → '13년) 309개교 → '14년) 310개교 → '15년) 318개교 실시 중 - 분할납부 신청제한 규제완화: 신청절차 간소화, 제증명발급 제한 철회, 장학금 수혜자 및 신·편입생까지 대상 확대 ○ 카드납부: 학생에게는 할부수수료, 대학에게는 가맹점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, 재정부담이 없는 분할납부제를 권장하고 있음 - '11년) 91개교 → '12년) 119개교 → '13년) 124개교 → '14년) 125개교 → '15년) 145개교 실시 중 <p>2) 학자금 분할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학생부담 경감 추진('16-1학기부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부방식(일시납/분납)에 맞추어 학자금의 대출방식을 선택(일시납/분납)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분할납부제 활성화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	<p>에 기여</p>
	<p>9. 등록금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할 것 (완료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등록금은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어 적용을 받고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의 등록금(수업료와 입학금)은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됨 - 다만, 소득공제 이중수혜 방지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만 가능하며,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음
	<p>10. 석·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할 때 심사비를 받지만 편차가 크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(추진 중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심사비 운영에 대한 의견 공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논문심사비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대학간의 인식 공유를 통해 학생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 추진 - 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 등 실무 의견 교환(2015.12.2.) 등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p>1) 논문심사비 책정에 대한 인식 공유 지속적으로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이 자율적,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문심사비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 - 교무처장협의회, 대학원장협의회 등 대학내 직능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식 공유 추진 예정
	<p>11. 대학교육의 잡 미스매치 대책을 강구할 것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대학과 산업계의 간극 해소 노력 추진</p>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(추진 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계관점의 대학평가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노력 지속('08년부터 시행) - 경제5단체와 협력하여 회원기업에 분야별 최우수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 권고 ○ PRIME(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) 사업, LINC(산학협력 선도대학) 사업,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및 확산 등을 통해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 강화 2) NCS 활용을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연계 등 유연한 학습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지속 ○ '4년제 대학 NCS 활용 가이드' 배포('16.5) 등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NCS를 활용,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 해소 방안 모색에 대한 지원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산학관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잡 미스매치 해소 노력 지속 ○ '산업계관점 대학평가'를 개선하고, 대학과 산업계의 소통구조를 체계화하여 '산학일체형 평가사업'으로 추진 계획 ○ 잡 미스매치의 상당부분은 청년 취업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노력 강화 -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산학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노력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<p>12.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, 비용 부담도 큰 데 학생들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(추진 중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기숙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지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지확보 규제 완화('16.1.19.) 등 대학 시설관련 규제 해소를 통해 기숙사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 - 교지 밖 학생기숙사 설치 가능, 2km 이내로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 단일 교지로 인정 등 - 다만, 수도권외의 경우 주변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기숙사 신축에 어려움 ○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기숙사 건립시 국·공유지 무상 사용, 운영비 감면, 기금예탁 활용 등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노력('16.5.19) ○ BTL 방식, 융자지원 방식, 전세임대주택 지원, 행복(연합)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노력 지속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p>1) 학생들의 주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지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내에 기숙사를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학컨소시엄, 지자체,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
	<p>13. 대학의 열람실이 부족한 실태를 감안하여 대학들이 적립금을 사용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열람실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방강의실 확대 등 대학도서관의 열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<p>해서라도 열람석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(추진 중)</p>	<p>람실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기간 중 열람실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, 강의가 없는 강의실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자구 노력 강화 ○ 등록금 인하 및 동결 등으로 재정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들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- 대학마다 적립금 규모나 여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함 <p>나. 향후 추진계획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서관 신축이나 증개축에는 상당한 예산과 준비계획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,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대학들이 노력하도록 적극 권유 - 소장도서나 전자자료 구입의 확충, 좌석이용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도서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불편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
	<p>14. 입찰공고를 공고기간이 이미 시작한 며칠 뒤에 게시하거나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게시하지 않도록 할 것 (완료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대교협이 업무포탈과 홈페이지상의 시스템이 동일화되어 있어서 입찰제안서나 입찰공고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(날짜 변경 등 주요사항 수정은 아닌, 문구 오타자 수정임)할 경우에 시스템에서는 수정하여 작성한 날짜로 변경되어 공고 게시가 며칠뒤에 나타나는 상황임. 포탈시스템에서의 이력관리를 포함하여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프로세스

구 분	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		를 새로 구축해야 가능한 바, 시스템을 개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
	<p>15.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데, 부당업무지시, 고용승계, 노임단가 준수 등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준수지침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(완료)</p>	<p>가. 시정·처리결과</p> <p>1) 사무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, 낙찰된 업체를 통해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, 4대보험 등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부 준수지침을 지키고 있음</p> <p>○ 시중노임단가 대비 비율 : 약 118%</p>